

전남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21곳, 제품 강화 검사 못받아

전남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21곳이 출하 전 당국의 제품 안정성 검사를 받지 못한 채 공사에 들어갔거나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화된 안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풍력발전단지는 육상풍력 19곳(435.9MW), 해상풍력 2곳(465.3MW)이다. 육상풍력은 영광 6곳, 신안 5곳 화순 2곳, 여수·순창·장흥·영암·무안·완도 1곳이다. 해상풍력은 영광 1곳, 신안 1곳이다.

법 적용에서 제외된 풍력단지에는 지난 21일 풍차를 받치는 지지대(타워)가 휘면서 꺾임 사고가 발생한 화순군 도암면 금성산 풍력 단지도 포함됐다.

‘출하전 검사 시행’ 개정전 운전시작·착공 2012년 발전기 진동 뒤 지역 2번째 사고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제품 결함도를 낮추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출하 전 풍력발전기 주요 제품(블레이드·나셀·타워)의 성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성능·열강화도 시험 결과와 자체 성적서 등을 검사한다.

법 적용 기준은 2023년 4월 22일 이후부터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풍력발전단지다. 그러나 해당 풍력발전단지들은 법 시행일 이전 이미 사전 기술 검토를 받고

작공에 들어갔거나 운전을 시작한 제품 출하 전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절차는 사전기술 검토를 받고, 통상 1~2달 안에 공사계획을 신청한 뒤 착공에 들어가는데 해당 단지들은 대부분 법 시행 이전 사전기술 검토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지역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115곳 중 해당 21곳을 제외한 육상풍력 단지 37곳과 해상풍력 단지 57곳은 강화된 안전

법 적용을 받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도 풍력발전단지 착공 전후 기술·안전 검사를 거쳤지만 이번 법 강화는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법 시행 이전 해당 육·해상 풍력발전단지들이 이미 사전기술 검토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타워 넘어짐·화재·풍차 파손 등을 포함한 풍력발전기 사고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5건 발생했다. 전남에는 2012년 영광풍력에서 발생한 발전기 진동 사고 이후 13년 만에 최근 화순 금성산풍력단지 내 꺾임 사고가 발생했다.

/오권철 기자



광주시립수목원 전시온실.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 도심숲 가득한 봄 향기... 캠핑·나들이객 유혹

광주호수생태원·시민숲야영장·시립수목원

광주 곳곳에 조성된 ‘도심숲 공원’이 나들이객을 유혹하고 있다.

광주시는 피크닉, 캠핑 등을 즐기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심숲 공원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걸으며 봄별을 즐길 수 있는 산책 명소다. 휠체어, 유모차 대여가 가능해 가족들이 나들이 할 수 있다.

지난해는 산림청이 주관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올랐으며 테마별 꽃길 등 다양한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다.

광주시립수목원은 바쁜 일상을 벗고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

시립수목원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숲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숲해설가가 참여자와 함께 수목원을 돌며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산림탐방을 도와준다.

또 전시온실에서는 날씨에 구애받

지 않고 다양한 열대 식물과 인공폭포, 분수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야외 잔디광장과 한국정원 등은 자녀와 함께 산책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도심 속 힐링 명소인 승촌포 캠핑장은 세척대, 화장실, 샤워장, 전기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최대 2박3일 머무를 수 있다.

인근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대형 미끄럼틀을 갖춘 놀이터와 함께 넓은 운동장이 있어 가족 단위 캠핑도 가능하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이용료 30%가 할인된다. 광주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야영장은 어린이놀이터, 자전거길, 산책로가 있어 가족단위로 방문하기 좋은 도심 속 쉼터다.

폐선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푸른길공원도 따뜻한 햇살 아래 봄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명소 중 한 곳이다. 동구 푸른길공원은 곳곳에 소규모 장식용 건축물인 광주폴리(Folly)가 설치돼 쉽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승원 기자

광주경찰, ‘노쇼사기’ 특별정보 발령... 추가 피해 예방

피해 사례 38건 중 31건 4월에 발생... 서부경찰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최근 광주에서 이른바 노쇼(No-show) 방식의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정보를 발령했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군부대·교도소·소방본부 등의 기관을 사칭, 음식점에 포장이나 단체예약을 주문한 뒤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 방

식의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노쇼 피해 사건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38건이 접수됐다. 이중 31건이 이달에 발생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13일 사이 피해가 집중(15건)됐다.

사기범들은 군부대 간부·교도소 직원·소방공무원을 사칭하며 도시락 포장이나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증을 보내주며 전투식량이나 방탄조끼·응급키트 등의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66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잠적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정상적인 납품업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 명함을 보내는 것은 물론 사업자등록증·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마저 위조, 피해

자들을 속이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경찰은 범행수단이 같고 동일수법으로 확인된 여러 사건을 병합하는 한편 광주서부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단체 주문 전화를 받을 경우, 선결제 또는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체주문 뒤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인 만큼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 시민단체 ‘윤석열 재구속, 지귀연·심우정 즉각 탄핵’

내란정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5일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정치권은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윤 전 대통령에 구속 정치 결정을 내린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게 됐다. 심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 시선을 돌리기 위해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적 죽이기 기소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기득권 범조 카르텔에 의해 내란 수사와 이에 대한 처벌이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심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나 지 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범까지 어겨가며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지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검찰 또한 온갖 개인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심우정 검찰 총장에게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내란정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5일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정치권은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내란정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제공

그러면서 “국회도 법원과 검찰의 의자박약을 알고 있음에도 지귀연과 심우정 탄핵을 미적거리고 있다”며 “법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떨어뜨리는 일이다. 즉각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현근 기자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받고 타인에게 넘긴 30대 친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민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딸 B양을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B군가에게 건네 매매한 혐의로

100만원에 생후 3개월 딸 팔아넘긴 친모, 징역 1년 법정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갓 출산한 딸 B양을 경제적 형편 탓에 양육이 어려워 영아 일시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친부와 함께 자신의 딸을 매입해 키워줄 이를 찾았다. A씨는 영아보호소에 “친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

의 서약서를 작성한 뒤 되찾은 B양을 매수 의사를 밝힌 B군가에게 넘겼다.

A양은 B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다. A씨는 이 중 1명은 양육 형편이 안 돼 입양시켰고 나머지 1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A씨의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변호

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

재판장은 “A씨가 낳은 세 딸 중 막내는 100만원을 받고 누군가에게 매매했다는 진술 외에 객관적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첫째 딸은 출산 직후 입양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둘째 딸 역시 친정에 맡겨 살아 있게 끔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은 타지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